

## 靈光原電 5, 6호기 說明會 有感

**전**남 영광군 홍농읍 일대는 86년부터 용량 95만kW 가압경수로 1, 2호기가 상업 발전에 들어간 데 이어 용량 1백만kW급 3, 4호기가 95년, 96년에 각각 준공, 가동될 예정이다.

80년대를 지나면서 전형적인 농촌마을에서 전력 생산 배후지역으로 탈바꿈한 이 지역에서 한전은 7월 12, 13일 이종훈 사장을 비롯한 정보현 원자력사업단장, 전재풍 원전처장 등 관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와 전라남도 기관장들과의 간담회 및 영광, 고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광 원전 5, 6호기 사업설명회 및 의견 청취를 가졌다.

李사장은 이날 설명회에 앞서 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총 에너지 소비와 전력소비는 산업화 및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기하급수적인 신장세를 보여왔다. 1970년을 기준하여 총 에너지 소비량은 현재까지 약 6배 증가하였고, 편리한 전기에너지의 소비량은 14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전기소비는 10년 내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01년과 2002년 준공 목표인 영광원전 5, 6호기 사업계획은 철저한 민주성과 공개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 국민적 합의를 얻은 뒤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번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원전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지역기관장들의 전력 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건설 예정지역인 영광, 고창 설명회에서는 지역 주민, 온배수 피해주장 어민, 각 사회단체, 지역기관장 및 군의회 의원 등 영광과 고창에서 각각 4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관심을 표명하였다.

李사장은 전력이 산업발전과 국민경제 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경제가 고도로 산업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전력설비의 확충을 통한 공급의 안전성, 국가의 정책,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피력하면서 영광 원전 5, 6호기 건설추진계획(안)을 설명하였다.

최근에 전남 영광군, 전북 고창군 등에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의 피해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측이 온배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상을 꺼린다는 어민들의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전기의 혜택을 누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적법한 절차와 제도범위 내에서 온배수 영향에 대한 피해 및 보상 대책을 철저히 조사하고 어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여 지원지역 범위 확대 및 22번 국도 확·포장, 전기요금 감면조항 등의 건의 뿐만 아니라 농,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특용작물인 화훼단지 조성 및 양식장 시설 검토, 지역 농수산물(건고추, 김, 특산물)의 적극구매 등에 관련된 지역사회발전 대책을 설명하였다. 또한 주민 참여에 방사능환경 등의 공동 감시 및 장기적인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영광, 고창군의 농어민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의혹으로 농산물의 판로가 막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바, 농민들의 생계보장과 1, 2호기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에 의하여 김, 노랑조개, 굴 등의 생산이 감소되

## 김 승 평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고 있으므로 한전은 온배수에 의한 어업피해를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영광, 고창 어민들이 선정한 기관이나 전문가가 피해조사를 실시하며 어민들의 보상요구를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95년 3, 4호기 가동시에 온배수의 영향이 더욱 확산 될 것인 바, 이에 따른 선보상 및 어민들의 동의를 얻을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지역지 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원금액을 증액하고 방사능 감시현황 등을 공개할 것과 지역지원과 관련한 명쾌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한전측에 요구하였다.

지난 86년 영광 1, 2호기가 가동에 들어간 이래 엄청난 사업 규모와 문화적, 사회적 괴리감에 따른 갈등 외에도 무늬아, 기형아, 기형가축 등 방사능 오염 피해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과 최근 온배수에 따른 해양 피해 주장 등은 영광군 지역사회에 엇갈린 명암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 영광원전이 낸 지방세가 군 재정의 34% 가량을 차지했는가 하면 올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비」만도 약 21억원에 달할 예정이나 영광원전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충분한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 영광, 고창 주민들의 시각이다.

원전 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 문제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원자력발전소 문제 중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알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의 비밀주의가 대중의 불신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번의 원전사업설명회는 원전의 실상과 정보를 폭넓게 공개하여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측면에서 달라진 한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이라는 문제에 급급하여 과연 반대운동이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지

식과 논리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반대의 주요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지역주민의 경우 원전건설을 반대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것인가?

물론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요구, 잃어버린 생계기반복구요구, 기존의 문화와 전통의 파괴, 미래의 불안정한 생활설계, 혹은 발전소의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폭의혹, 설사 원전 수명이 다하는 동안 사고 없이 운전 되더라도 주변지역의 환경 오염 등, 이러한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반핵, 반원전 운동으로만 보여짐으로써 지역민들이 집단적 및 개인적 이기주의에 집착하여 집단 및 개인의 이익이 사회와 국가에 우선 되어야 한다는 논리만을 전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영광원전과 지역주민들은 원전과 함께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주민의 자손들이 지키고 가꾸고 살아가야 할 귀한 터전으로서 원전과 이웃이 되어 함께 노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함께 풀어가야 할 사람들이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공사는 5, 6호기 건설에 앞서 공정한 환경영향조사와 피해대책,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등, 포괄적이고 면밀한 준비 작업을 병행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원전운동이라고 일방적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으로써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주민들의 반원전성향이 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하여 원전 주변 문제들을 풀어내는 것이 최선책임을 밝히는 바이다.